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11/ 15 통권 164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대통령은 우선 경청하라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국제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 보세요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 금감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공동매입의 대표사업자는 각 구성원에게 부당산 용역대금의 분배비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거래대금에 10%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여부>

개념, 구분(조문)	과세방법,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손금산입문제
부가세 거래개요 (부가세법 제4조)	모든 재화와 용역의 제조·판매·공급자는 거래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며, 판매를 위한 제반매입원가의 10% 부가세는 차감함(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
매입세액공제 (부가세법 제38조)	사업 연관 목적으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재화·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 해당액 (매입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만 차감정산되므로, 공제 안받고 임의로 비용처리 한 것은 비용불산입함)
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법 제39조)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미발급, 사실과 다른 기재, 사업무관지출,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기업업무추진비 등, 면세사업용 구입, 사업자등록신청전 구입
적격거래증빙 등	적법세금계산서(부가세법 제32조), 영수증 등(부가세법 제36조),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세법 제46조)
필요경비불산입(개인) (소득세법 제33조제9호)	사업상 구입액이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불산입 열거(부가세매입세액 공제 적격은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으로 종결, 임의·실수로 매입세액공제받지 않고, 비용 반영해도 필요경비 인정안됨)
법인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제1호)	세금과공과금의 조건없는 손금불산입 열거사항(① 법인세, ② 벌금, 가산세 등,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순자산감소의 손금이 아니고, 매출세액에서만 차감되어야 함
손금산입가능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액 중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소형차 구입유지 등, 기업업무추진비 등)
적법요건 미비시	매입세액 중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미발급, 사실 아닌 경우 등은, ①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면서,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됨
업무무관지출 등	부가세매입세액불공제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업무무관비용이니 필요경비부인(법인은 손금불산입됨)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운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49호 / 주간 46호

2023. 11. 15.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42)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거래대금에 10%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여부	표지
C E O 에 세 이	대통령은 우선 경청하라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폐전선 판매 수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에 대한 문의 - 사망위로금 -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 경기도 김포시 → 서울시 김포구 변경시 달라지는 점	8 9
직장인 Survival	작은 기회도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들어라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233, 2023.04.07) -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면법규법인-6591, 2023.03.10)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모든 중소기업 지원 강화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콘도건물 신축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후 공유제방식으로 분양해도 감면세액 추정 안됨	13
세무정보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14 24
경영정보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40 43
회계정보	- 금감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대통령은 우선 경청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리더(leader)는 l-e-a-d-e-r다. -경청(listen)하고, 실천(execute)하고, 지원(assist)하고, 토론(discuss)하고, 평가(evaluate)하고, 책임(respond)진다.

리더는 들어주고 보스는 고함친다. 리더는 술선수범하고 보스는 비겁하게 뒤로 뺀다. 리더는 지원하고 보스는 채찍질 한다. 리더는 토론하고 보스는 명령한다. 리더는 평가해서 보상하고 보스는 공을 독차지한다. 리더는 책임지며 보스는 희생양을 찾는다. 무엇보다 리더의 최고 덕목은 경청하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의 표현을 빌리면 “경청한 다음에 설득”해야 한다. 최고의 컨설팅도 지도하는 게 아니라 경청(consult)하는 것이다. 컨설턴트 세계에는 조사자 위에 분석자가 있고 분석자 위에 충고자가 있고 그 위에 경청자인 컨설턴트가 있다. 소설가 김정빈씨에 의하면 ‘들어준다’는 말 자체가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어서 준다는 것이다. 물건이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준다는 뜻이다.

백아(伯牙)는 거문고 연주의 명인이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그의 연주의 묘미를 들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답답한 가슴을 부여안고 홀로 산에나 들에 나가 연주를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거문고 소리의 묘미를 알아주는 나무꾼 종자기(鍾子期)를 만나게 됐다. 곧 두 사람은 벗이 됐다. 중국에서는 친한 벗을 지기(知己)라고 한다. 나아가 백아와 종자기처럼 상대의 가장 절실하고 핵심적인 가치까지 알아주는 벗을 ‘지음(知音)’이라고 한다.

경청은 훌륭한 부하를 거느릴 수 있게 한다.

“나는 전략에 있어서는 장자방만 못하고 싸움에 있어서는 한신만 못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소하만 못하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말이다.

‘크림슨 타이드(Crimson Tide)’라는 영화가 있었다. 핵잠수함 이야기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사령부로부터 “러시아의 핵기지로 핵미사일을 조준하고 발사를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러나 10초의 카운트 다운을 준비하고 대기중이던 잠수함에 갑자기 본부와의 교신이 두절된다. 이 때 함장은 발사를 주장하지만 젊은 장교는 본부의 분명한 명령없이 핵을 발사하면 3차 대전으로 간다고 반대한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두 파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한다. 결국 통신이 재개되자 젊은 장교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잠수함은 무사히 귀환한다는 내용이다. ‘노맨’을 부하로 키우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경청하고 책임지는 리더 중의 리더가 CEO다. CEO는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현실주의자다. 경영이란 사람과 돈 그리고 생산과 기술을 결합하여 성과를 내는 일이다. 그래서 CEO십이란 리더십의 덕목에 더하며 돈과 자원의 결합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다.

현실은 체계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상주의자는 몽롱해져서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되는 게 CEO십이다. 전 서울대총장이 대통령에 뜻이 있었던 모양이다. 사실 교수는 경정보다 가르치기 바쁜 이들이다. 또 학자는 책을 통해 대체로 죽은 사람들이나 먼 나라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연습은 많이 한 편이다. 하지만 현재 이곳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얽힌 첨예한 말을 경청한 훈련은 거의 없는 이들이다.

오랫동안 군인 장교출신 대통령들이 국민을 질병취급해서 괴로운 적이 있었다. CEO를 아무나 탐내는 것은 모두의 비극이다. 대통령은 우선 경청에 도(道)가 터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3일 (금)	11월 6일 (월)	11월 7일 (화)	11월 8일 (수)	11월 9일 (목)
미	달	러	(USD)	1343.20	1325.80	1303.20	1306.10	1305.50
일	본	엔	(JPY)	892.67	887.27	868.80	868.62	865.23
영	국	파	운 드	(GBP)	1638.17	1640.61	1608.80	1605.98
캐	나	다	달 러	(CAD)	977.30	970.57	951.35	948.79
홍	콩	달	러	(HKD)	171.66	169.45	166.63	167.03
중	국	원	(CNH)	183.20	180.49	178.58	179.41	179.22
유	로	화	(EUR)	1426.08	1421.85	1397.16	1397.27	1398.06
호	주	달	러	(AUD)	863.74	863.43	845.78	840.15
싱	가	폴	달 러	(SGD)	984.03	978.88	964.94	964.2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2.69	280.33	281.07	279.59
							279.59	278.74

폐전선 판매 수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Q 본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철거 작업을 하면서 나온 폐전선을 판매하여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의 부수재화나 용역으로 인정되므로, 의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폐전선의 경우 면세사업관련 일시적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공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에 대한 문의

Q 당사는 현재, 당사의 구매주문에 대하여 한국바스프(주)에 의해 승낙/수행되고, 청구되며, 전달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당사가 수입 통관하는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처로부터 면세계산서와 인보이스를 수취하였지만, 향후에는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를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기획재정부 유권해석)된다고 합니다.

현재 당사는 인보이스(외화)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고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시에는 부가가치세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래처에서 공급가액은 기존방식으로 인보이스(외화)로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만큼은 원화로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거래처가 요청하는 지급방식은 특이할 뿐아니라 세법적으로도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법에 근거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세법에는 거래대금 지급시의 결제통화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다른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세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과세표준만 정확하다면 세법상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망위로금

Q 근로자가 아닌 거래처에 사망위로금 전달시 계정과목을 접대비외에 다른 적절한 계정과목이 있을까요?

A 업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계정처리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Q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하여 자문 요청드립니다.

21년 2기 확정신고 후

작성일자 2021.12.01/ 발급일자 2022. 3. 2 자로

마이너스 금액의 매입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21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임)를 자문요청 드립니다.

A 기존에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수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정상적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합계표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업자마다 고객확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있게 마련이다. 보통 고객유치를 위해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 재화의 사업상 증여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는 공급대가가 수반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급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즉,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증정하는 "사업상의 증여"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은 재화를 증여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수증자(사은품이나 경품수령자)는 세금부담없이 사은품이나 경품을 사용소비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증자로부터 재화의 대가는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수증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사용·소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판매촉진상 재화의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을 별도로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통 사업자가 자기예산으로 납부하고,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의 무대비용으로 하여 비용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 등의 간주공급 등의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사업상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업자가 구입한 재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이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되는 재화(사은품이나 경품 등)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예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사은품 등에 대해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품 등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356, 2000. 2. 9).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서 사업상의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광고선전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은품이나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은품이나 경품은 수령자의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보통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은품의 경우 계속적 거래, 구매, 판매량 등의 마일리지 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이미 판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소득 46011-21044, 2000. 7. 26). 그러나 사은품이라도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제도 46012-12338, 2001. 7. 24).

역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득 46011-21019, 2000. 7. 22).

즉,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반면에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은품이나 추첨을 통한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으로서 사업자가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구분	연금저축	IRP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	900만원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148만5000원	118만8000원

※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서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음

화

주요국 횡재세 도입 현황

국가	대상업종	내용
유럽연합	에너지	연대기여금 명목 화석연료 기업 이익이 2018~2021년 4개년 평균 20% 초과시 최소 33% 부과(2022·2023년 한정)
		회원국 별도 횡재세 도입시 부과하지 않음
영국	에너지	석유·가스 25%, 발전 45% 추가 부과 (2028년까지 한시 부과)
이탈리아	은행·에너지	순이자수입 1년 간 40% 부과안 발표 후 반발. 횡재세 규모를 은행 위 험가중자산의 0.1% 제한하는 방안 논의 중
스페인	은행·에너지	8억 유로 초과 은행 순이자 및 수수료 수입에 4.8% 세금 일시 부과
헝가리	에너지·제약· 금융·항공 등	업종 별 다름



경기도 김포시 → 서울시 김포구 변경시 달라지는 점

(자료: 뉴스1)

	김포시	김포구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관리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밀억제권역(서울)변경으로 규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 -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의 5-10%) 부과 - 4년제 대학 이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의 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신규사업* 협의 가능 * 태리, 고촌 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0.75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GB 잔여총량 고갈로 김포시 신규사업 협의 어려움
재정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규모 16,103억원 ※ 인구 507,657명 	(참고) 서울시 관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규모 9,715억원 ※ 인구 500,582명
대입 혜택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
세금 혜택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건축물, 토지), 양도소득세 등 洞 대비 감면세를 반영 (예시) 등록면허세 제1종 [읍·면] 27,000원 [동] 67,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밀억제권역(서울)중과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본점·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2.8% ⇒ 6.8%↑) - (면허분 등록면허세) 종별50~140%↑ - (재산세) 공장용건축물(0.25%⇒0.5%↑) -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 10% ↑
건강 보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22%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
자치권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의 시·군 사무 처리 50만명 이상 특례사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도시계획·주택건설 등 42개 사무 삭제 (자치구 ⇒ 서울시) 50만명 이상 특례사무 처리불가
혐오시설 집중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 도시계획권한 행사 가능 - 기본계획 수립,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개발사업 승인 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불가, 관리계획 중 위임사무만 입안 및 결정, 도시개발사업 승인권 상실 등 - 서울시 직접 결정에 의한 혐오·기피 시설 김포 집중 가능성 우려



작은 기회도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들어라

미국 오리건 주 상·하원의원에 네 번이나 당선된 임용근씨는 1966년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가서 정치계에까지 진출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타국땅에서, 그것도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미국땅에서 그가 무려 네 차례나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선 고지를 달성한 후에 가진 축하파티에서 그는 자신의 성공비결에 대해 "준비된 자에게는 작은 기회도 성공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을 가기 전에 그는 고아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일을 맡았다. 덕분에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군에 입대해서도 미군부대에 간 그에게 목사를 둘 만한 상황이 못 되었던 부대에서는 어느 날 크리스마스 설교를 부탁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5년 동안 부대에서 목사 일을 하게 되었으며 우연히 지인의 부탁으로 고아원 합창단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렇게 처음 미국땅을 밟은 그는 후에 이민길에 올랐다.

그가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부대에서 목사 일을 하게 될 기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는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기회를 포착했다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으려면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능력과 특별한 재능, 스킬 등 기회를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불씨가 있어도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료가 없으면 활활 타오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공동매입의 대표사업자는 각 구성원에게
부동산 용역대금의 분배비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함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233, 2023.04.07

질 의

-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구성원들이 용역을 공급받고 협의회 대표사가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 협의회 구성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용역 수행기관에 대금을 지급하고 협의회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협의회 대표사가 협의회 구성원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회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회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사전법규법인-646, 2023.01.26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 1.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575, 2023.03.09

■ 질 의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법인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설립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면법규법인-6591, 2023.03.10

■ 질 의

-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23.03.06.

[질의내용]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453, 2022.10.11

■ 질 의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귀 회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든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세무조사 등으로 오작용이 드러났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된 문외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순이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선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자 152만명...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활용하면 편해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

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 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홍익표 "막대한 이익 낸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횡재세' 도입 절실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 위기와 구조화된 양극화로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높여 실질적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난방비와 고금리, 고물가로 허리가 휘때 정유회사는 15조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정유회사가 3%달하는 성과금을 지급했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얻은 올해 상반기 수익이 3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정유업계와 은행업계에 고통분담을 같이 해 달라"면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결손이 난 경제위기를 초래해 놓고 긴축재정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와 여성, 청년 예산삭감이 아닌 증세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특히 현재 미국도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발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국세청, 2023. 11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추계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수)까지 추계신고 가능합니다.
 -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 (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사례 |

- 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 (2,000,000원 + 6,000,000원) × 1/2 = 4,000,000원

-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고지제외)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 |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3.6.30.) 이전 휴·폐업자
- ▶ '22. 12. 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 1. 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

- (분납방법)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 30.(목)까지 납부하고, 분납



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 1. 31.(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 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 ▶ 국세고지서 배송 상황 확인 가능(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 ▶ 중간예납 고지서(등기 발송) : 직접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상세조회」화면 제공

-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경우 조회됩니다.
- (분납가능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세액이 조회됩니다.
- (고지제외 사유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고지제외 사유가 조회됩니다.

3

상반기 힘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 (추계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3.1.1.~ 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 30.(수)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 (추계세액이 소액인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Ⅰ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1/2)을 고지하였습니다.
- B씨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3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30%인 45만원 미만)
-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 B씨는 자금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B씨에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B씨의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사례	
75,000원 * 중간예납기준액 : 75,000×2 = 1,500,000	① 2023년 1~6월 종합소득금액	7,000,000원
	② 종합소득 연간환산액(①×2)	14,000,000원
	③ 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④ 종합소득과세표준(②-③)	12,500,000원
	⑤ 산출세액(④×기본세율)	750,000원
	⑥ 중간예납산출세액(⑤×1/2)	375,000원
	⑦ 세액공제·기납부세액	75,000원
	⑧ 중간예납 추계액(⑥-⑦)	300,000원*

* 중간예납기준액(150만원)의 30% 미만이므로 추계신고 가능

- ☐ (의무적 추계신고)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Ⅱ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Ⅱ

업 종	직전 연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 (추계신고 방법)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

입력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로그인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이동 후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2. 신고사유2 선택(전년 실적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신고사유1) 3.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후 신고서 작성
------	--

4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또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2023.12.31.까지 신청분)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5 주요 문답자료(FAQ)

1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예.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하여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첫화면 → 납세자별 맞춤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하여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채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1.에 3%, 12.2.부터는 1일 0.022% 부과

3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4 11월에 분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되나요?

- 예. '24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4.1.31.입니다.

5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요?

- 예.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붙임 1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 20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 § 65①)
-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 76)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 6. 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 § 123, 소칙 § 64)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021년 개정)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 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 § 68)
5. 중간예납기간 중(2023. 1. 1. ~ 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 § 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 § 86)

붙임 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구 분	주요 내용					
가상계좌 이체	○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분납도 가능					
전자납부 (PC)	<div>○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 : 07:00 ~ 23:30</div> <div>○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div> <table><tr><td>00:30 ~ 23:30</td><td>농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td></tr><tr><td>07:00 ~ 23:30</td><td>산업,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td></tr></table>		00:30 ~ 23:30	농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 ~ 23:30	산업,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00:30 ~ 23:30	농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 ~ 23:30	산업,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30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	
	00:30 ~ 23:30	농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 ~ 23:30	산업,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한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세무서는 업무시간(09:00 ~ 18:00)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3년 11월 30일(목)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 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붙임 3 -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신청방법

흐택스

입력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 클릭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상세내용 '확인하기' 클릭 3. '회원정보 수정 바로가기' 클릭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를 동의함으로 수정 5. '회원정보 수정하기' 클릭
------	---

붙임 4 -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절차

- ① 배달 알림톡 수신
- ② 배달 알림톡 열람 (상세보기 클릭)
- ③ 수령장소 선택 가능 (인터넷우체국, 우편 앱)
- ④ 배달상황 조회 (인터넷우체국, 우편 앱)



붙임 5

중간예납 추계액 서면신고 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3. 1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③ 성 명	김**	④ 주민등록번호	111111-222222
⑤ 주 소	서울 종로구 **로 111 (전화번호: 010-1234-5678)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구 **로 222 (전화번호: 010-1234-5678)		

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	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 납세액	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 부세액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500,000	1,000,000	0		1,500,000			
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	⑪ 중간예납기간(1 월~6월)의 종합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연간 환산액 (⑩×2)	⑬ 0월 결산금	⑭ 종합 소득공제	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⑬-⑭-⑮)	⑯ 산출세액 (⑮×세율)	⑰ 중간예납 산출세액 (⑯/2)	
	7,000,000	14,000,000	0	1,500,000	12,500,000	750,000	375,000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		
	⑱ 감면 세액	⑲ 세 액 공제액	⑳ 토지 등 매 매차익 예정 신고 산출세 액	㉑ 수 시 부 과 세 액	㉒ 원 천 징 수 세 액	㉓ 세액공제·기 납부세액 계 (⑱~㉒)	㉔ 계 (⑰-㉓)	㉕ 분납 할세액 (㉔월 이내)
	0	70,000	0	0	5,000	75,000	300,000	0
㉖ 신 고 사 유	<p>□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p> <p>㉗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p> <p>6월 30일 현재 $\frac{\text{㉔ 중간예납추계액}}{\text{㉕ 중간예납기준액}} = \frac{300,000}{1,500,000} = 20.0 \%$</p>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11월 일

신 고 인

김**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	----------------

작성방법

- ⑨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⑬ 이월결산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산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 ㉖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㉕ 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0	0		①
	부동산임대업 외	10,000,000	3,000,000		7,000,00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0	0		0
합 계		10,000,000	3,000,000		7,000,000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0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0	0
	부동산임대업 외	7,000,000		③ 7,000,00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0	0	0
합 계		7,000,000	0	7,000,000

※ 작성요령

1.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겨보세요

— 국세청, 2023. 1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하여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 (도입배경)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총 59개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그러나, 각종 설문조사 및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Ⅰ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Ⅰ

(개,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합계	339,269	38,197	367,046	44,335	404,414	51,188
세액공제	104,299	24,865	129,955	28,442	159,256	36,000
세액감면	234,970	13,332	237,091	15,893	245,158	15,188

- (제도소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고용·설비투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 국세청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포함)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확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중소기업 → ('23.3월) 모든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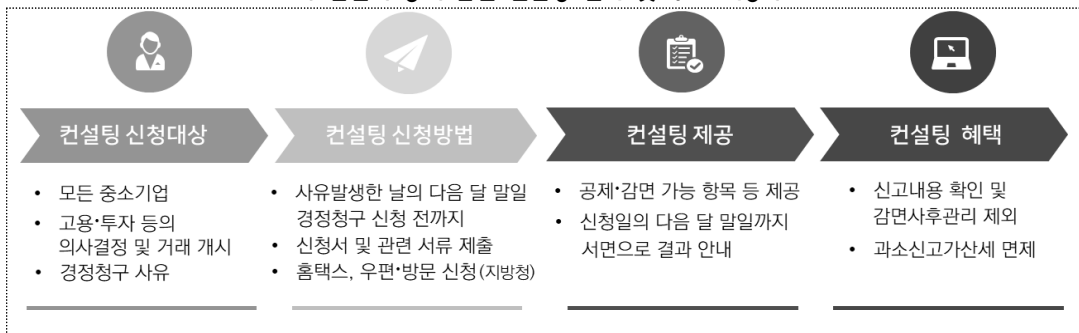


수입금액	~10억	10억~20억	20억~50억	50억~100억	100억~1,000억	합 계
법인 수	606,835	105,018	107,947	48,419	40,671	908,890
					당 초	
	확 대					

* 신청 대상 기업이 기존 40,671개 법인에서 908,890개 법인으로 확대('22년 신고기준)

- ☐ (신청범위)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한) ❶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❷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 국세청 누리집 안내코너(국세정책/제도>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및 유튜브(국세매거진)에 구체적 신청방법 및 혜택, 작성 사례 등 관련 내용을 게시
- ☐ (제도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❶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❷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및 주요 내용 |



3 도입 이후 운영현황 및 컨설팅 사례

- (운영현황) '22.8월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 특히, 신청대상을 확대한 이후 수입금액 10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21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건(72%)을 차지하여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현황 |

(건)

공제·감면 항목		합계	'22년(8~12월)	'23년(1~6월)
합 계		758	208	550
고용유지· 증대관련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153	54	99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16	36	80
	경력단절여성등 세액공제	100	30	70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53	10	43
	그 외 고용유지·증대 세액공제	125	13	112
	소 계	547	143	40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63	18	45
통합투자세액공제		30	13	17
그 외 공제·감면		118	34	84
소 계		211	65	146

- (주요 사례) 컨설팅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 가능 항목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례 |

사례①	신청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컨설팅 제공	<input type="checkbo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 <input type="checkbox"/>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추가 안내



사례②	신청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컨설팅 제공	<input type="checkbox"/>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능 <input type="checkbox"/>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을 추가 안내
사례③	신청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컨설팅 제공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인 화물운송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가능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사업 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을 추가 안내
사례④	신청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컨설팅 제공	<input type="checkbox"/>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공제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

4

향후 추진계획

-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또한,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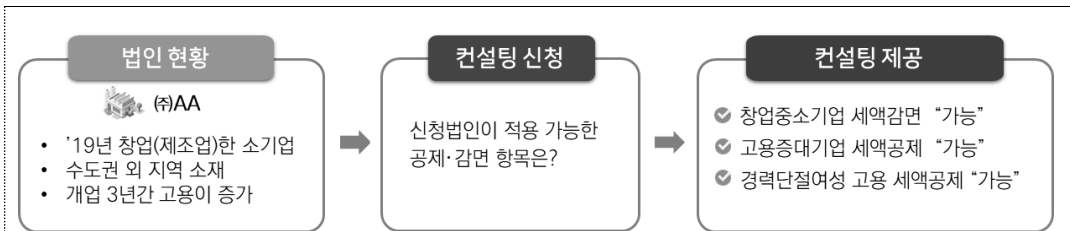
참고 1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이용 사례

사례 ①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가능한 공제·감면이 있는 지?

□ 신청내용

- (주)AA는 '19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개업한 이후 꾸준히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① 제공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 6), 고용중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 § 29의7)가 중복 적용 가능하여 **백만 원이 공제 가능

② 추가안내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조특법 § 29의3)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확인되어 공제 가능 항목을 추가 안내

③ 유의사항 안내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 6⑦)과 고용중대기업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어 향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 고용중대기업 세액공제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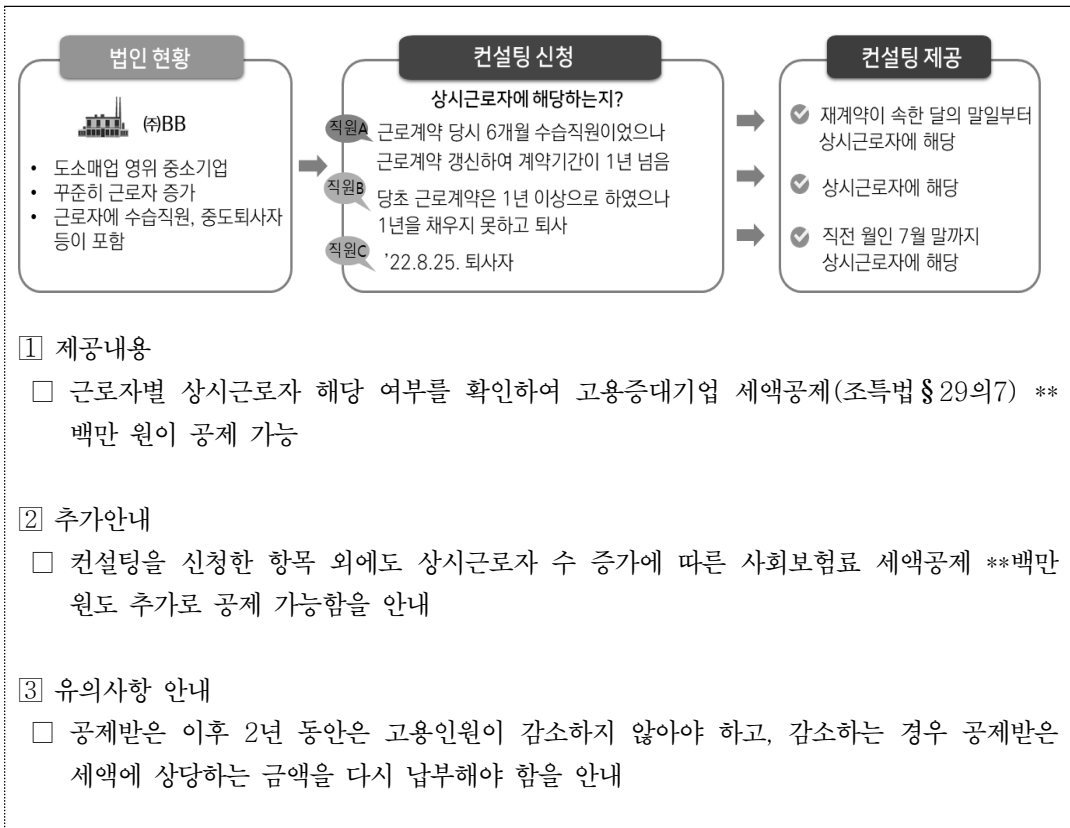


사례 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 신청내용

- (주)BB는 모터펌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과거 5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에 수습직원(비정규직), 중도 퇴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동안 세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다가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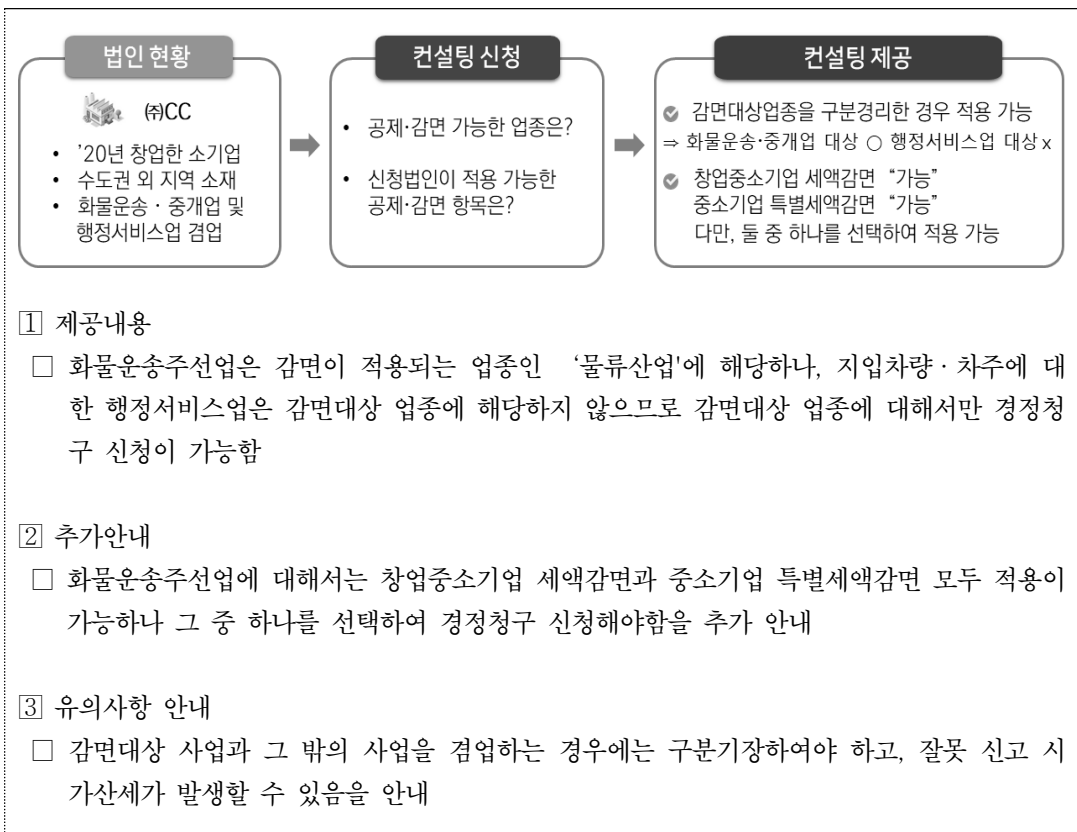


사례 ③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신청내용

- (주)CC는 '20년 개업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화물운송(택배)·운송중개(주선업) 및 지입차주에 대한 행정서비스업(세무·보험·차량관리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임
- 그동안 공제·감면을 알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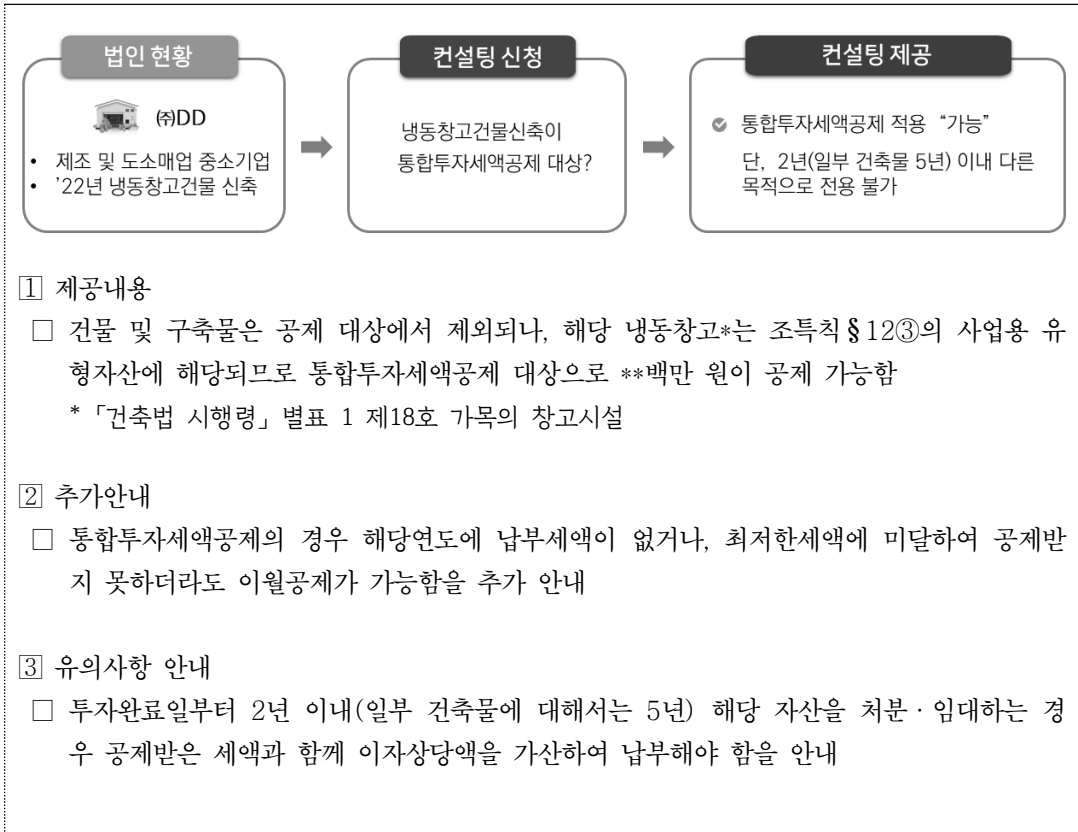


사례 ④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신청내용

- (주)DD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2년 냉동창고 건물을 신축
- 건물 및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컨설팅 제도 안내문을 받고 신축한 냉동창고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함

□ 컨설팅 제공내용 및 추가안내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경정청구 중에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포함) 해당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팅 신청)
	③ 과세연도란은 세액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④,⑥ :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제 또는 감면 항목의 번호를 제1호 서식 3~5쪽의 목록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⑤,⑦ : 신청금액란은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하거나 지출 예정인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제·감면 컨설팅 세부 신청내용

⑧ 사실관계
⑨ 컨설팅 신청사항
⑩ 관련 규정 및 사례(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심판·심사결정례 등)
⑪ 신청인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구분	세액공제 항목	조특법	계산기준(중소기업 기준)
중 소 기 업 지 원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1%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10/100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④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7/100
	⑤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연구 개발	⑥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10/100 *법인세의 10% 한도
	⑦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⑧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⑨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⑩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⑪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
	⑫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5/100
투자 촉진	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4조	기본공제 : 일반기술 투자금액 × 10/10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 × 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배 한도)
제작 지원	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0/100
고용 지원	⑮ 산업안전보건법 등 출자를 병행 이행 후 복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30/100
	⑯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30/100
	⑰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100
	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20/100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분 초과 임금증가분 × 20/100
	⑲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사근로자 증가수 × 1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21.12.31 ~ '22.12.31 : 1,300만원) 청년등과 직전연도 대비 상사근로자 증가수 × 700만원 (수도권 밖 770만원)



고 용 지 원	⑳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청년등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 가수 ×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청년등외: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 가수 ×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 정규직전환 : 해당 인원× 1,300만원 육아휴직복귀 : 해당 인원× 1,300만원
	㉑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1천만원
	㉒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㉓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 ~ 29세) 및 경력단절 여성 순 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 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기 타	㉔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㉕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50%)
	㉖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㉗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 연 750만원
	㉘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㉙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 도)
	㉚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 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㉛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 ×300원(200만원 한도)

	㉔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50/100]/익금및손금합계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 ×5/100)/익금및손금합계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㉕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지원	㉖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75,100/100)
	㉗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연구개발	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㉙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제3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100)
	㉚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국제거래	㉛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지역균형	㉜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㉝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㉞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㉟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㊱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㊲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 외 소득/과세표준)×(50/100)
공익사업	㊳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기타	④⑦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0,30,50,75/100)
	④⑧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0)
	④⑨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99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⑤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⑤⑪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⑤⑫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100,50/100)
	⑤⑬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⑤⑭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⑤⑮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	제121조의1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25/100)
	⑤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⑤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⑤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⑤⑲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붙임 4 - 중소기업 주요 컨설팅 공제·감면 항목

번호	구 분	조문	공제·감면 내용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6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재지별, 감면대상 업종에 따라 50~100% 감면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규모별, 소재지별, 업종별 요건에 따라 5~30% 감면
3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	조특법§63, 조특법§63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 후 이전하는 경우 소재지별 50~100% 감면

4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규모별, 투자대상별 10~16% 공제 (‘23년 한시적으로 공제율 12~25%로 상향)
5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29의7	소비성 서비스업종 제외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규모별, 소재지별, 상시근로자별 4~13백만원 공제
6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조특법\$30의4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50~100% 공제
7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조특법\$29의4	직전 3년의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임금 증가분의 20% 공제
8	경력단절여성고용 세액공제	조특법\$29의3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30% 공제
9	육아휴직복직자고용 세액공제	조특법\$29의3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 공제
10	고용유지 세액공제	조특법\$30의3	경영상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임금 삭감액을 세액공제로 보전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 국토교통부, 2023. 11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다.
 -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044-201-3857 / 팩스 044-201-5587

참고 - 주요 Q&A

1. 왜 연두색번호판 대상차량 기준을 8천만원으로 하였는지?

- 당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하여 고가 차량 기준을 검토하였고,
○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
-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으며,
○ 이는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음
- * 고가 가해차량, 저가 피해차량 간 사고발생시 8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부과('23.6.7,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발표)

2. 왜 기존차량은 소급 적용을 안하는지?

-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 * '17년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에도 신규차량만 적용

3. 올해 초 공청회(안)과 달리 대상을 축소한 이유는?

- 공청회 발표 후 적용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기간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음
-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슈퍼카)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며,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검토하였고,



-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감면을 받으니 법인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

4. 8천만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은?

-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음
-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과 사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
 - * 차량 외관에 회사명, 로고 등을 래핑하여 외관으로도 구분이 되는 차량이 다수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2023.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 노령: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이변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공제 재적 가입자: ('22년말) 166.7만명 → ('23년 8월) 171.7만명 ↗ 5만명 순증
공제 재적 부금: ('22년말) 21.6조원 → ('23년 8월) 23.8조원 ↗ 2.2조원 순증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인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생략)</p>	<p>●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다음 각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주된 영업장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고는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재난으로 직접적인 시설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영업장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p> <p>6.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p> <p>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293조의5제1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596조제1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p> <p>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0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금융감독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3. 11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6가지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을 Big4 회계법인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Big4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말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부당한 감사 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 * 감사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감사보수 인상을 최소화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사항과 관련하여,
 -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이하 “Big4”)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 ‘23.10.18일(수) Big4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된 내용을 담아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

II. 감사업무 관행 개선 주요 논의사항

1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 ① 기업은 감사계약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토로
 - 실제, 최근 2년간 Big4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

* 감사위험에 따라 시간당임률의 격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일관된 판단기준은 필요

⇒ (개선방안) ①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②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② 대부분 감사계약서에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 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기재*되나 실제 환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외부감사표준계약서 제8조제2항) 제1항의 감사보수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매출총액, 사업장 수, 감사소요시간, 연결대상회사 수의 증감,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 수의 증감 등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 지급 시에 조정된 과부족 금액을 가감한다.

⇒ (개선방안)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

2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③ 기업은 감사보수의 여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부대비용”)을 지급하나, 회계법인이 부대비용 협의시 세부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

* (외부감사표준계약서 제8조제3항) 감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을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장비(숙박비, 교통비 등), 2. 인쇄·복사비, 3. 통신비와 각종 조회관련 비용, 4. 실험비, 5. 감정료·자문료, 6. 측량비, 7.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 회사가 요구하면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회계법인별 정해진 양식이 없음

- 실제 Big4가 청구한 부대비용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

⇒ (개선방안) ① 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②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

④ 그간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실제 회계법인의 부대비용 집계 및 내부 통제 절차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

- 또한, 각 감사팀별로 부대비용을 집계하여 기업과 협의하며, 회계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도 미비

⇒ (개선방안) ❶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❷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❸ 회계법인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

3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⑤ 외부감사시 외부평가 및 포렌식 등의 회계법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 일부 기업은 “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한다고 주장
- 반면,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하여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

⇒ (개선방안) ❶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

❷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 ❸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시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

* 회계법인이 감사목적에 감안하여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특정 기관을 권유하는 방식은 자제할 필요

⑥ 지정감사 등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보수는 증가한 반면, 수습회계사의 투입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검부담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감사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 제기*

* (개별회사 사례) 주기적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40% 가량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감사시간 중 70% 가량이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으로 대체되어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수검부담만 증가하였다는 의견

⇒ (개선방안) ❶ 중요 계정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❷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❸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Ⅲ.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금융감독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 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 Big4 등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은

- 회계법인 역할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을 바라보는 높아진 잣대를 잘 이해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금년 11월까지 개선할 것이며,
- 감사보수와 관련하여서도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 피감사회사인 기업의 권리와 편의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I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관행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원은 금번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계획